

정부 비상대응

중견·중소기업 20조대 금융지원... “모든 상황 선제적 대비”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검토
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대처
금융위, 모니터링 체제 유지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대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7%대의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의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피해·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 할인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은(7조 원)과 한국산업은행(8조 원)·IBK기업은행(2조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합 20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상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매일 개최해 향후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간 공조하여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

치를 신속히 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맡는다.

같은 날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꾸렸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예기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국민 안전·에너지 안보’ 방점... “육로수송 등 귀국방안 강구”

신속대응팀 파견·상황파악팀 가동
원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집중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우리 교민 2000여명(추산)을 인접국으로 육로 수송하는 등 중동 체류 교민 안전 귀국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란 사태 관련 민주당·외교부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국제정세) 불투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우리 나라가) 먼저 입장을 정하기 보다는,



김영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란 사태 관련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외교부 당·정 간담회에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일단 국익과 직결돼 있는 국민 안전 확보 대책에 집중하고, 원유 등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있는 상황 변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현지 교민의 안전과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선 현지 교민 보호와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 대책과 여

행객 숫자·상황 파악에 우선 집중할 방침”이라며 “현재 교민들이 중동 지역 13개국에 약 2만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지에 신속대응팀이 파견된 상태고, 국내에서는 총리를 중심으로 상황파악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유 수송선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선 “현재 우리 상선 총 30여척이 그(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이 중에서) 정확하게 원유 수송 상황을 추가로 파악해 오는 6일(외통위) 상임위 전까지 보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원유 확보 대책에 대해 “현재 우리가 비축한 물량을 봤을 때 향후 다른 대안적 경로가 있는지, 미국에서도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걸프

국가들도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스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체 20%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다행히 가스는 경로가 이미 다양해져 있어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지만, 그래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행정부와 이란의 전쟁이 유럽으로 확산될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은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더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



metro

美 정부 “경제적 충격완화 조치 시행”

전략비축유 방출·제재 조정 가능성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이란 상황을 브리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부터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런 상황

을 사전에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하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이 구체적인 완화 단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 단독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전략비축유(SPR) 방출, 제재 조정, 금융 안정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핵심 원인은 중동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과 지역 송유관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미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중동 내 일부 석유 및 가스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는 ‘지렛대’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 테러 정권이 전세계 에너지의 20%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지렛대”라며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파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이번 작전의 핵심 목표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생산 및 발사 능력을 파괴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뉴시스

남부발전,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가동

“어떠한 상황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연료 수급과 해외사업장 안전 점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월 28일(한국 기준) 발생한 이란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된 비상대책반은 ▲에너지 수급대책반(LNG·유연탄 등) ▲발전 운영 대책반(발전운영·건설자재 등) ▲안전·보안대책반(해외사업장 안전·사이버보안 등) ▲외환 리스크 대책반(재무·

외환 등)으로 구성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LNG 및 유연탄 등 주요 연료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발전설비 운영과 건설자재 조달 상황까지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사업장 안전 및 사이버보안 점검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